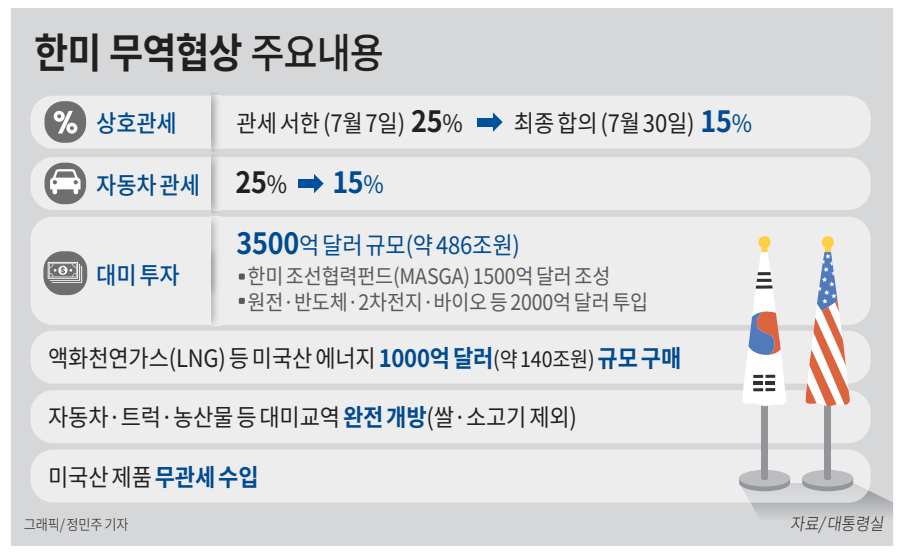
조선업 등 3500억달러 투자… 구윤철 "상호호혜적 결과"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동차·트럭 시장 100% 개방
1000억달러 LNG 별도 구매
구 부총리 "세부내용 추가 협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관세 10%포인트(p) 할인 받는 데 수백조 원이 들게 됐다. 30일(미동부시간) 한미 간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지난 4월 제시된 25%가 아닌 15%를 미국시장에 수출 시 물면 된다. 그 대가로 3500억 달러(486조)을 현지에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 펀드에 대한 금융투자가 골자다. 투자 합의금의 40%가 넘는 1500억 달러는 조선업 부문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원전·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에 투입된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 조선산업의 부흥을 그간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내건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우리는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국내에 들여와야 한다. 또 미국산 자동차·트럭에 대한 100% 개방이 합의됐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한국산에 관세 15%를 매기게 되지만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은 0%의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게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관세 2.5%)에 비해 가격경쟁력 우위를 보여 왔는데, 이제 동일한 15%의 선상에서 겨루게 됐다.

미국은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도 거세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고 합의된 바 없다"며 일축했다. 특히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타결 직후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투자'에 대해 상호호혜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30일 대표단을 이끌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했다.

구 부총리는 "이게 한국에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미국에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며 "조선업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급속한 상황에서 미국하고 동맹함으로써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분야가 한국이 협상을 빨리 종결하게 했다. 다른 나라보다 내용적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며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원자력 등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 투자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소셜에서 언급한 3500억 달러는 조선업(1500억)과 경제안보 분야 금융지원(2000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에너지 분야에 "향후 4년간 LNG 구매를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이 협의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 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향후 양자 간에 비관세장벽 관련 협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검역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의 상한 폐지, 기술협력 등을 포함한 협의가 계속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 나가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와 기자회견장에 동석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나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급이 아니면 다른 나라 협상단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경우, 사실 각료급인데 특별히 직접 협상했다는 건 한국을 굉장히 존경하고 한국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걸 방증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는 것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양국 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미 FTA 사실상 무력화… '비관세 장벽' 일부 방어

日·EU 수준 관세 타결… 선방 평가
대미 투자이익 두고 해석 엇갈려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15%·4500억 달러(에너지 구매 포함) 투자'를 골자로 타결됐다. 이번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대한 일종의 '가늠자'로 평가된다.

상호관세 분야에선 일본·유럽연합(EU) 등과 같은 15%로 해결된 것은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 측에서 집요하게 요구하던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없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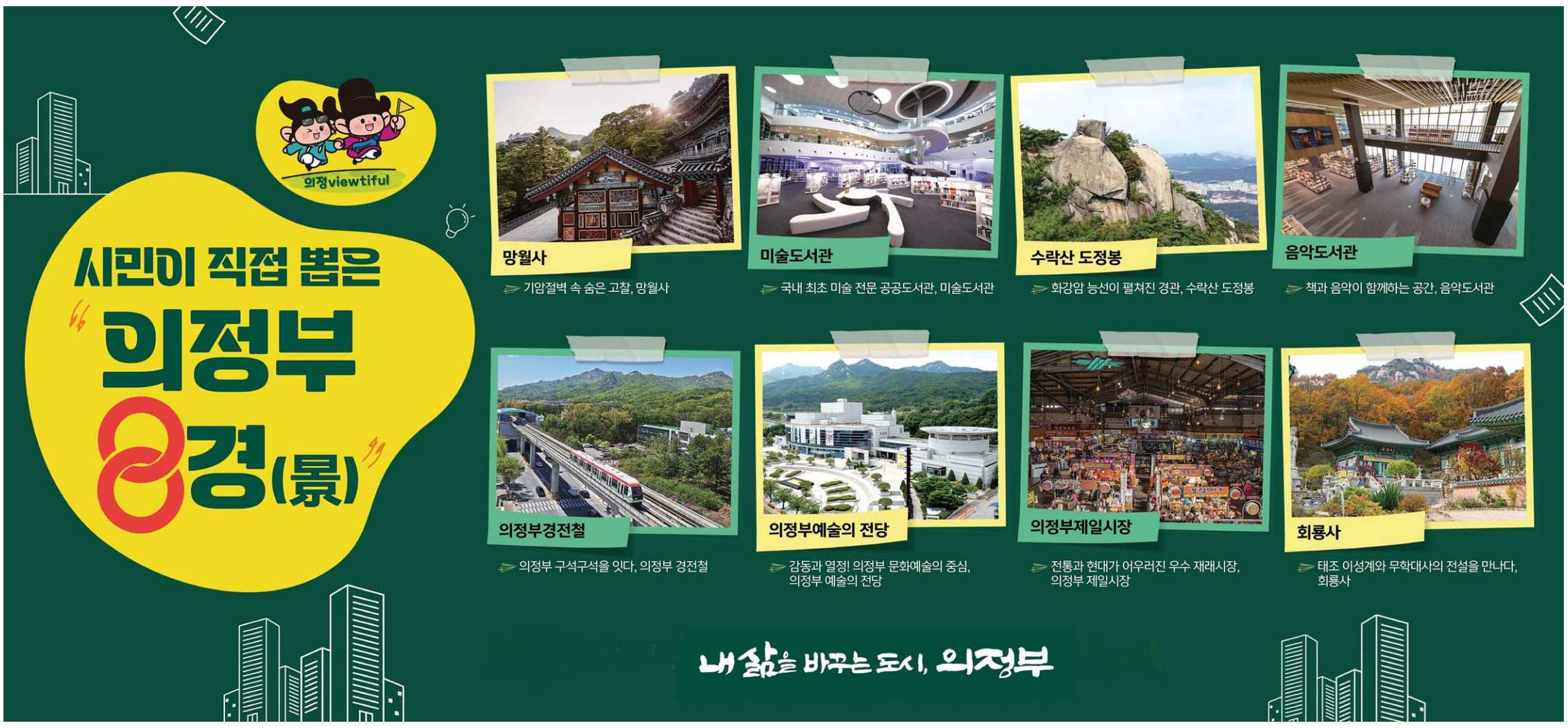
다만, 자동차 분야는 우리 측에서 끝까지 12.5%를 타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또 기존에 존재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도 문제다. 한미 간 대미(對美) 투자 이익을 두고도 해석이 갈렸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우리 정부는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와 1000억달러의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미국이 제시한 25%를 15%로 10%포인트(p) 낮추는 데 성공했다.

당초 미국이 요구한 것은 4000억달러의 투자,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이었다. 그러나 시장 개방 없이 투자를 통해서만 일본·EU와 동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일본과 EU, 영국(관세 10%)의 경우 시장 개방이나 군사 장비 구매 등의 조건이 붙었다.

게다가 조선업 협력에 투입될 1500억달러는 사실상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미국 금융 투자 패키지는 2000억달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사실상 미국이 FTA를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있다. 4월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WTO, FTA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은 대미 투자 이익을 미측이 90% 가져가겠다고 밝혔는데, 우리측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 나왔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의 원문에 'retain 90%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투자 수익 90%를 보유)라고 돼 있다"며 "미국 정부가 사업을 추천해서 구매 보증(off-take)을 한 뒤 미국에서 이익이 나오면 과실손금으로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해당 자본이) 계속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게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서예진 기자 syj@